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절실

국내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업체당 5.7건)으로 밝혀져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에 밝혀졌다. '08.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추진된 금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공식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역위원회에서 지재권 피해 공식 조사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지재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국내기업 전체(3,64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08.9~11)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1,049개 중 28%(294개) 기업이 총 1,665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모집단 전체(3,644개)로 환산하면 약 1,00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의 순이며,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권리별 침해 · 피해 건수 〉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기타	합계
피해건수	335	172	433	670	55	1,665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 업종의 약 60% 업체가 피해를 입어 가장 심하고, 업체당 피해건수는 식품·의약 업종이 평균 1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기업의 75%가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재권 보호대책이 요망된다. 응답기업의 54%만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전담인력은 업체당 2명에 불과하다.

섬유·봉제·신발 업체의 피해가 심각

침해상품의 품질 및 가격 수준이 진품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지할 경

우 기업의 영업악화, 신제품 개발의욕 저하 등 피해 확산 우려된다. 침해상품은 일반적으로 진품에 비해 정밀성이 떨어지며 업종에 따라 안전성(식품의약)이나 내구성(자동차부품)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기업들은 침해 발생 시 경고, 합의를 위한 조정 및 법적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단속 및 조사요청은 저조한 편이다. 기업들은 시정조치 미흡으로 인한 재발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비용·시간대비 효과가 미흡하여 지재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 피해비율 및 업체당 피해건수〉

구분	피해비율(%)	업체당(건)
농림 수산 광업	33.3	2
전기 가스 수도 운수	2.5	1
건설	19.6	2.1
도 소매	38.1	7
통신	56.8	1.3
금융 보험 서비스	15.6	3.5
식품 의약	23.6	10.2
섬유 봉제 신발	57.6	7.1
석유 화학	26.4	2.6
금속 재료	21.2	7.6
기계류	19.6	2.2
전기 전자 컴퓨터	25	3.9
자동차 부품	33.6	1.8
기타	46.9	9.6
전체	28.1	5.7

무역위원회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많고 손실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단속·조사활동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피해가 많은 업종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시장조사로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 강화한다.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확대 설치

업종단체와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업체 중심으로 상담을 통해 필요시 무역위 직권조사로 연결되고, 시정조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재권 침해 판정물품 통관시 세관의 확인을 강화하고, 침해 판정물품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한 ‘지재권 침해 기관정물품 확인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침해상품 거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형사고발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적발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한다.

침해 예방활동, 대응조치 및 정부 구제제도 등이 포함된 종합안내서 및 사례집 발간·배포,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활용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기업의 자체 역량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국내기업 3,644개 중 28%인 1,019개 업체가 침해·피해를 당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재권 보유현황에서, 국내기업의 국내외 전체 지재권 출원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유 응답기업 현황>

구분	특허권실	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기타*
백분비(%)	80.8	59.6	63.1	71.7	7.7
응답기업 수	848	625	662	753	81

* 기타는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저작권, 지리적표시) 등을 의미함

해외 지재권 보유현황도 특허권이 가장 많고, 상표권, 디자인권 순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에 많이 등록되고 있다. 특허권은 미국이 26.4%로 가장 높고, 상표권, 디자인권은 중국에서의 보유비율이 각각 20.7%, 28.5%로 가장 높음 편이다. 70%이상의 기업이 해외 지재권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응답하고, 보유한 기업도 대부분 50건 미만으로 나타나 아직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해외 지재권에서 특허권 보유가 가장 많아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기업의 74.9%가 현재보다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다소 강화 52.4%, 대폭 강화 22.5%)했다. 현재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100으로 볼 때, 응답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수준은 평균 74.5 정도로 인식된다.

100이하로 인식하는 기업이 84.1%(882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50미만으로 인식하는 8.6%(9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지원 필요하다. 보호수준 50 이하 인식비율은 중소기업 11.9%, 대기업 5.2%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89.6%), 금융보험서비스(89.1%), 기계(85.9%) 등이 100이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전략상 지재권 창출 및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5.6%(매우 중요 54.7%, 약간 중요 30.9%)에 달한다.

지재권 전담조직 절반 이상이 확보

지재권 전담조직 및 예산 현황에서는, 응답기업의 53.8%(564개)가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전담인력 수는 업체당 평균 2명이나 1~2명만 두고 있는 업체가 83.1%인 것을 볼 때 업체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건설, 금속재료 업종의 전담조직 보유비율이 낮고, 기계, 섬유봉제신발, 금속재료 등의 업종은 전담인력 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담조직은 있어도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없는 기업이 88.5%로 대부분이며, 책임자는 부장급이 26.6%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57.1%) 기업이 전담조직을 출원·등록·유지 활동에만 활용하고 있다. 지재권 관련 연간 예산은 응답기업의 70.9%가 5천만원 미만이며, 5억원 이상은 1.8%에 불과하다. 자동차부품, 통신 업종의 평균 예산규모가 크고, 금융보험서비스, 도소매, 기계, 금속재료 업종의 예산이 취약한 편이다.

침해로 인한 피해 현황에서는, 응답기업의 28%인 294개 업체가 최근 3년간('05년~'08.9월) 총 1,665건(업체당 5.7건)의 지재권 침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이 57.6%로 가장 심하고, 도소매

(38.1%), 자동차부품(33.6%) 업종이 평균 이상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3%로 24.4%인 중소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응답업체 중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당한 업체가 42.6%로 가장 많고 특허권(39.2%), 디자인권(37.8%) 순으로 나타났다.

〈 권리별 침해·피해 건수 〉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기타	합계
피해건수	335	172	433	670	55	1,665

대기업은 상표권 침해가 59.5%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은 특허권 침해가 많으며, 중견기업과 소기업은 디자인권 침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지재권 피해업체 수를 분석한 결과, 피해업체 비율이 50%이상으로 파악된 업종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허권에서는 금속재료(71.4%), 전기전자컴퓨터(58%), 건설(55.6%), 기계(55.6%)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권에서는 전기전자컴퓨터업종의 피해가 큰 편

상표권에서는 식품의약(78.6%), 도소매(70%), 금융보험서비스(63.6%), 섬유봉제신발(59.3%)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리별 업체당 피해건수를 분석한 결과 금속재료, 섬유봉제신발, 식품의약 업종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권은 금속재료(4.2건), 전기전자컴퓨터(1.5건), 건설(1.2건)이, 실용신안권은 금속재료

(2건), 디자인권은 섬유봉제신발(2.3건)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상표권은 식품의약(9건), 섬유봉제신발(4건), 도소매(3.5건)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 기업규모에 따른 권리별 침해·피해 비율 〉

[단위: %]

구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특허권	42.0	48.1	38.8	37.4
실용신안권	30.5	12.7	23.3	16.5
디자인권	50.2	35.4	42.2	29.8
상표권	20.6	25.7	34.5	59.5
신지식재산권	8.7	0	0	4.9

침해·피해규모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재권 피해업체 중 57.4%가 자사의 피해규모를 심각하게 인식(다소 심각 39.6%, 매우 심각 17.8%)하고 있다. 식품의약, 금속재료, 기계 업종 업체들이 특히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도소매, 기타 업종은 피해업체 비율이나 피해건수가 많음에도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최근 3년간 지재권 침해로 인한 매출손실액에 대해 피해업체 중 63.4%(185개)가 5억원 미만으로, 특히 25.5%(75개)는 1천만원 미만으로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반면, 건설, 기계, 금속재료, 자동차부품 업종은 5억원 이상으로 응답한 업체가 35%를 넘어 피해 예방이 필요한 편이다.

침해·피해 발생경로에서는, 지재권 피해업체들은 침해여부를 시장조사(25%), 국내외 취급점

(16.6%) 등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16.4%)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하다. 특히, 시장조사 시 발견은 전 업종에서 주요 경로로 파악되고 있어 침해단속을 위한 시장조사의 체계적 지원 필요하다.

시장조사에서 침해여부를 발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요 확인경로가 상이하므로 향후 이를 감안한 적절한 단속 추진되어야 한다. 통신은 인터넷(47%), 금속재료는 대리점·딜러(24.5%), 섬유봉제신발은 국내외 취급점(21.2%)에서 주로 확인된다. 침해물품 제조는 경쟁업체(56%), 위탁업체(8.2%) 등 평소 익숙한 업체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8.8%나 된다.

침해 발생지역으로는 모든 업종이 국내에서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아시아에서 침해를 경험한 업체가 30%, 북미 등 기타 해외는 7.8% 업체가 경험했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국내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중요하며, 해외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춘 보호방안 강구 필요하다. 해외국가별로는 중국(45.5%), 대만(9.8%), 미국(7%), 일본(4.3%) 순이다.

또한, 온라인사이트에서의 침해 경험은 국내의 경우 통신, 금융보험서비스, 섬유봉제신발 업종 등에서 많으며, 국외의 경우 식품의약 및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침해상품의 가격·품질수준에서는, 진품 수준이 100일 때, 침해상품의 가격과 품질 수준에 대해 75이상 100이하라는 업체비율이 각각 37.8%, 35.1%로 가장 많다. 전반적으로 가격보다는 품질 수준을 낮게 보고 있으며, 진품 수준 이상이라고 보는 업체도 가격은 7%, 품질은 3.5%나 되었다.

침해상품을 방치할 경우 피해 확산 우려

침해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업종은 방치할 경우 기업의 영업악화, 신제품 개발의욕 저하 등 피해확산 우려된다.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가격수준을 높게(75 이상) 보는 업종은 기계(61.5%), 금속재료(53.5%), 전기전자컴퓨터(52.3%), 식품의약(51.9%), 건설(51.8%) 등이다.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품질 수준을 높게(75 이상) 보는 업종은 기계(57.9%)이며, 식품의약(46.8%), 석유화학(44.5%), 전기전자컴퓨터(43.1%)도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진품과 침해상품의 품질격차 요소를 파악한 결과 정밀성(21.5%), 기능성(20.8%), 디자인(20%)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며, 안전성(16.3%), 내구성(15.8%)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식품의약의 안전성(32.8%), 자동차부품의 내구성(40.5%)처럼 제품특성에 따라 업종별 응답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침해·피해 예방활동 현황에서는, 응답기업(1,049개) 중 38.4%만 지재권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편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6.9%)에 비해 중소기업(31.3%)의 예방활동이 저조하고, 기업의 R&D비율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통신이 예방활동에서 효과

통신(88.7%), 자동차부품(58.9%), 식품의약품(55%) 업종 등이 예방활동을 잘 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을 하는 경우 7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피해발생이 적은 금융보험서비스(20.9%), 전기가스수도운수(27.5%) 등은 활동 저조했다. 주된 예방활동은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37.2%), 내부직원 보안교육(24.3%), 전담조직 설치·운영(22.7%) 등이다. 정부시책 활용(6.2%), 타 기업과 공동 노력(5.6%)은 매우 저조했다.

예방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과 예산 부족이 가장 높으며(57.1%), 비용·시간대비 효과가 낮다(19%), 예방방법을 모른다(10.8%) 등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약품과 건설 업종은 예방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29.6%, 21.8%에 달해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침해·피해 대응 현황에서는, 침해를 당했을 때 87.3% 업체가 이에 대응하였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은 대부분(94.9%) 대응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대응비율이 높은 것(79.6%)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컴퓨터(76.3%), 건설(80.6%)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비율

이 낮은 바 그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지원조치 강구한다. 대응방법으로는 침해업체에 경고조치, 법적조치 시도, 합의를 위한 조정 시도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발생지역별 대응방법 선호도

[단위: %]

구분	국내 침해	해외 침해	온라인 침해
침해업체에 경고조치	34.9	26.9	36
법적조치 시도	32	22.3	22.9
합의를 위한 조정 시도	14.5	13.3	10.8

침해·피해시 대응한 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73.3%가 국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 방법을 모른다(25.4%), 담당기관을 모른다(17.9%)는 응답이 높아 각 기관의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다. 또한, 조치미흡에 따른 재발가능성에 대해서 염려(22.7%)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전기전자컴퓨터업종이 침해피해 대응비율이 높아

침해·피해시 법적 대응의 구체적인 방법은 형사고발에 의한 입건(41.6%),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23.7%) 등을 많이 이용했다. 분쟁 대응 시 애로사항은 '비용·시간대비 효과 미흡'이 54.6%로 단연 높았으며, '실효성 없는 법적 처벌'도 23.2%로 높게 나타났다.

침해·피해시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시간대비 효과를 고려했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담당부서와 인력 부족

〈업종별 정부·공공기관 지원제도 활용 현황〉

[단위 : %]

구 분	강연 및 세미나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권리취득 및 소송절차 정보제공	특허 등 기술평가 지원	해외출원 비용 지원	국내외 침해현황 정보제공	해외 법률 사무소 소개	전문가 무료상담	정부간 교섭 등 활용	해외 침해 실태조사 지원
농림수산업	16.7	33.4	0	0	16.7	0	0	16.7	0	0
전기가스수도운수	13.7	25	16.3	13.7	13.7	19.4	5.6	16.8	8.1	8.1
건설	5.1	3.1	3.8	7.4	0	2.5	0	4.4	2.6	2.6
도소매	11.9	9	8.4	5	2.1	5.6	2.1	6.9	7.7	2.7
통신	25.1	31.9	31.9	25.1	0	0	0	0	0	0
금융보험서비스	9.2	7.6	10.8	19	7.1	8.7	2.3	12.6	3.9	4.8
식품의약	10.4	13.8	17.2	9	11.7	7.4	6.1	19.2	1.4	2.3
섬유봉제신발	7.1	10.6	11.9	9.7	4.9	9.7	4.8	7.3	2.4	2.4
석유화학	16.3	13.9	12.3	12.3	12.3	8.1	0.9	7.2	3.1	3.3
금속재료	16.2	11.5	8.7	9.3	12.7	9.3	4.7	12.2	3.5	5.8
기계류	9.8	10.3	12.5	12.5	10.2	6.1	1.9	4.4	1.9	1.9
전기전자컴퓨터	21.5	14.9	11.4	15.9	13.9	8.4	3.8	14.7	3.3	3.9
자동차부품	14.7	29.8	20.8	8.4	12.5	13.6	0	12.5	12.5	8.4
기타	10.1	8.4	11.5	10.6	7.2	9.7	1.4	12.4	3.9	4.8
전체	13.5	11.9	11.2	11.6	9.4	8	2.6	10.6	3.7	3.8

(20.3%), 대응상대를 모름(10.9%) 등도 높게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 대응수단으로 국내외 지재권 조기취득(19.2%), 국내 행정기관 단속절차 이용(16.2%), 제조 및 판매업자 경고조치(15.2%)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제도 활용 현황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정부·공공기관의 지재권 관련 지원방법 중 강연 및 세미나(14.7%), 권리취

득·소송절차에 관한 정보제공(14.6%), 전문인력 교육·양성(13.8%)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그 외로는 특허 등의 기술평가 지원(12.4%), 전문가 무료 상담(11.8%), 해외출원비용 지원(7.9%), 국내외 침해현황 정보제공(7.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지원제도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가 추진되어야 한다.